

公益效果만 17조 6천억으로 GNP의 18.1% 投資는 政府예산의 0.35%에 불과 국토의 65%를 방치하려는 격



權 五 振
(篤林家協會長)

山林의 公益機能이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새삼스러이 말할 必要가 없다. 우리가 學校에서 山林의 機能에 대하여 배우기는 主機能이 木材를 生産하고 그 附隨的으로 公益機能이 發生하므로 이를 들어 間接效能이라고 배워왔다.

그러나 오늘날 世界的인 추세는 前者의 主機能보다는 後者의 間接效用이라고 하는

公益的 機能에 대하여 보다 重視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이는 産業의 高度化에 따라 發生하는 各種의 公害에 대하여 靜化의 機能이 있을뿐만 아니라 複雜 多端한 都市生活 속에서의 스트레스의 解消와 레크레이션 등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需要가 날로 急增되고 있기 때문이다.

木材生産의 主機能이 重要치 않은것이 아니라 그만큼 世態의 變化가 컸기 때문이고 山林의 重要性은 더한층 커진것이라고 보는것이 옳을것이다.

山林廳의 發表에 따르면 이公益機能에 대한 計量化 研究에 成功하여 年間 公益의 效果는 87년 基準하여 17兆 6千億원으로 이는 林産額의 26倍(日本은 35.8倍)에 達하는 額이고 G N P의 18.1%에 相當하는 額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요즈음 各行政 部署에서는 새해 豫算 짜기에 나름대로 名分을 내세워 經濟 企劃院과 年例行事로 투쟁(?)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山林廳 年間 豫算은 1千億원을 겨우 땀땀하고 있어 政策立案者들의 林業에 대한 物理解는 참으로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것이다.

아무리 政府形便이 어렵더라도 林業을 理

解하는 國民의 意識과 政策立案者들의 山林에 대한 深度있는 理解만 있다면, 발등의 불만 끄는式의 豫算投資보다는 앞서 公益機能額의 計數를 生覺치 않더라도 山林에 대한 豫算이 全體 政府豫算의 0.35%에 不過한 인색한 豫算編成이 되어서는 안되고 最低 政府豫算의 1% 内外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主張이다.

앞으로의 資源戰爭品目は 石油가 아니고 木材이다.

근자에 “우루과이 라운드” 등과 관련된 一般農產品에 대한 輸入開放 壓力을 받고 있는 것과는 아주 對照的으로 木材資源은 몇年동안에 금방 造成되는것이 아니므로 海外 林產資源國들은 自國의 林產資源保護政策強化로 原木 輸出을 禁止해 나가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資源戰爭 品目は 石油가 아니라 木材이다 하는것이 世界 林學者 環境學者들의 主張이다.

따라서 우리의 現實은 이웃의 日本과 比較해 보아도 山林面積이 國土에 대한 面積比率은 우리와 거의 같은 67%(山林面積은 2,520萬ha로 우리의 4倍)이고 林相이 우리는 20年生以下の 幼令林이 73%, 日本은 거의가 成林으로 幼令林은 29%에 불과하며 따라서 林木蓄積이 우리는 216百萬m³(ha當 33m³), 日本은 2,862百萬m³으로 우리의 13倍, ha當 蓄積으로는 116m³으로 우리의 3倍가 넘고 있음에도 林業에의 投資豫算은 '90에 우리의 1,178億원은 全體33兆원에 대하여 0.35%에 不過한 반면 日本은 4兆 3,664億원으로 292兆 1千億원에 대하여 1.5%, 우리의 37倍에 이른다.

이러한 投資比率 가지고는 앞으로의 2030年代의 木材自給率 50%의 資源化計劃은 無望한 것이다.

現在의 木材自給率이 16%이고 나머지 84%가 外國產 木材輸入에 依存하지만 앞서 指摘한대로 外國產 木材로 無限定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林產資源 고갈이 深化되기 前에 하루 빨리 林產資源增殖에 國家의인力 點施策이 따라야함을 強調하는 바이다.

林業은 本是 超長期性이고 低所得事業이므로 個人이 投資하기는 構造的으로 어려울 뿐만아니라 近年에 와서는 林業을 마치 投機의 對象으로 보고자 하는 否定的 視覺마저 팽배해 있어 문제를 더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個人이 山林에 投資하기는 점점 더 難望해졌고 이러한 脆弱點을 政府 支援으로 補填해 주는길밖에 없다고 生覺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이 89년에 2조5천억원, 90년엔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산림사업에 재원을 투자하지 못하는 정책집행자의 식견을 의심하고 싶은 심정이다.

정부예산의 팽창이 물가상승을 초래한다는 논리는 일면 수궁이거나 그것은 단기사업과 소비성사업에 치중하는 정책에 기인하는 것이지 수십년이 걸리는 임업에 투자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수 있는 일이다.

국민의 공동재산으로 우리세대에 기필코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으로 가꾸어 놓겠다는 책임감을 정책 책임자들은 통감하고 이에 걸맞는 정책추진과 예산의 확대지원을 촉구하는 바다. ★